

文, 노원에 각별한 애정... 지역구에 민주당 포진때문?

대통령, 3년째 노원구 방문

“포용국가, 국민 개개인 역량 중요” 노원방문, 지역의원들에 반사이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발표한 가운데, 취임 후 해마다 노원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문 대통령은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2020년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제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들의 기본생활 영위' 관련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현장 보고 때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를 의미한다"며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휴식하고, 기본생활을 유지해야 개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노원구를 찾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당시 대선후보였고,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 7일 댄 노원구에서 진행된 '노원 에너지로주택'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에너지 하우스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국토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주택'이다.

2018년 3월 6일 댄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

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교내 연병장에서 졸업생들에게 계급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해마다 노원구를 방문하자 정치권의 시선은 노원구 국회의원들에게 향했다.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고용진(노원 갑)·김성환(노원 병)·우원식(노원 을) 의원이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해마다 노원을 방문하는 이유가 측근들을 만나기 위함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대통령이 노원구를 방문하고, 그 구의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면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4@metroseoul.co.kr

해외진출기업 10곳 중 8곳 “매출 늘거나 유지”

산업부·코트라, 2018 실태조사

중 법인 '매출증가 예상' 39% 불과 171곳은 사업장 축소·철수 등 고려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법인 10곳 중 8곳이 앞으로 매출이 증가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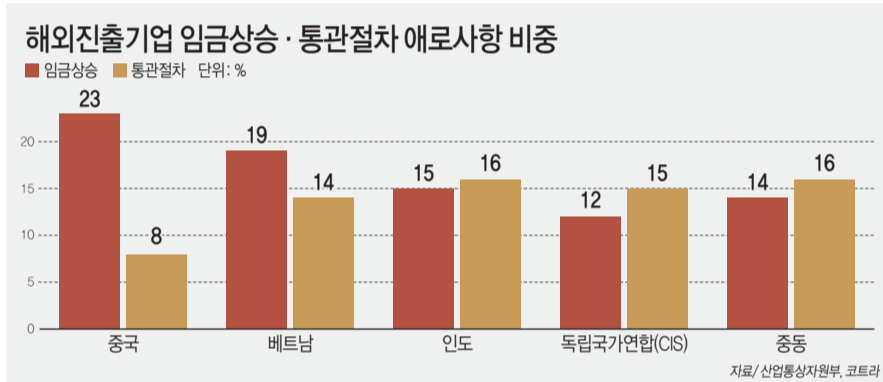
하지만 중국·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임금상승·인력채용을, 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에 진출한 기업들은 법률·조세·통관과 관련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19일 전세계 125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1만2500여개 현지진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년 코트라에서 실시해온 기존 현지법인의 애로사항 조사에 더해 매출실적, 고용현황 등 경영현황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매출실적 조사에 응한 현지법인 2513곳 가운데 46%는 향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36%는 매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감소를 예상한 법인은 18%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미국, 일본 등에 진출한 법인의 50% 이상이 매출 증가를 예측한 반면, 중국 진출 법인의 매출증가 예상 응답률은 39%에 불과해 중국 시장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장 축소·철수·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법인은 171개사이고 이 가운데 중국내 소재



법인이 34%로 가장 많았다.

고용현황 조사에 응한 현지법인(3502개사)은 단순 생산직종의 경우 99% 현지인력을 채용하고 있었으며, 마케팅·상품개발 등 관리직종에서는 한국인 채용 비중이 13%(1만2200여명)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현지법인 설립으로 국내 본사 신규인력 채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인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은 28%로 해외진출이 국내 고용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법인들은 또 인력채용, 경쟁심화 등 노무·영업 분야를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꼽은 가운데 중국·베트남은 임금상승, 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은 통관절차 관련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든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통적인 투자대상국인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임금상승·인력채용 애로와 가격·품질경쟁 심화에 따른 애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지기업의 성장 및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심화가 지속하고 있

는 것으로 풀이됐다.

중국 대체시장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은 임금상승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높은 이직률에 따른 애로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통관절차와 관련된 애로도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CIS·인도 등은 법률·조세·생산 인프라 미비에 따른 애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 불분명한 관세부과 기준 등이 다수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에 진출한 법인 중 일부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 등에 대한 정보부족을 애로로 제기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기업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현지법인 애로해소를 위해 전세계 주요국에 위치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밀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점을 고려하는 기업은 최근 개편한 유턴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복귀를 다각도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사법부 압박하는 여당 김경수 판결문까지 분석 “드루킹 진술은 허위·과장”

로스쿨 교수·변호사, 더민주 간담회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근거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부가 검사의 유죄 입증 책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부분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김 지사)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2016년 11월 김 지사가 키크랩 시연 뒤 1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음해성 허위 진술을 했다가 이를 실토했음에도, 재판부가 키크랩 참관과 개발 지시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그 신빙성을 문제삼을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이를 합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드루킹 일

당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차 교수는 재판부가 내세운 대법원 판례가 사건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키크랩 시연 상황 등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판부가 검사에게 다른 객관적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김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어야 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키크랩 개발 지시와 승인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객관적 증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지사의 지시·승인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경공모 회원이 아닌 제3자의 증언과 동영상, 녹음파일임에도 검사가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도 법원이 김 지사의 업무방해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특검의 네이버 압수 로그기록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해당 기록이 실제 키크랩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키크랩을 98% 완성했다는 2016년 12월 28일 드루킹 정보보고가 같은달 4일부터 키크랩을 이용했다는 범죄사실과 모순되고, 이는 로그 기록의 발원지가 불분명하다는 반증이라는 논리다. 그는 재판부가 2017년 7월 21일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답장한 점을 온라인 정보보고 확인 근거로 삼은 점도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범중 기자 joker@

文, UAE 왕세제 초청 27일 정상회담

반도체·5G·ICT 등 발전방안 협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 초

청으로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며 "모하메드 왕세제와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식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다가올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은 '특별전략동반자관계(핵심우방국가)'로서 기존 교역·투자 및 건설·에너지 등 협력에서 ▲반도체·5G(5세대 이동통신)·ICT(첨단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방산 ▲농업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확

대해 양국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모하메드 왕세제는 현재 와병 중인 '칼리파 빈 자에드 UAE 대통령'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전반을 운영하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4년 2월 이후 5년만이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참여정부 때 1번(2006년 6월), 이명박 정부 때 2번(2010년 5월·2012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1번(2014년 2월) 각각 방한하기도 했다. /우승준 기자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